

생하더라도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쓰러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요모조모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투자계획을 세웠다 해서 곧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복잡한 입찰절차와 평가절차, 험난한 협상과정도 거쳐야 한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더라도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패한다. 사업자와 금융기관은 원초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친다. 협상보다 자금을 빌리는 것이 더 어렵다. 민자사업의 단점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의 사례로 볼 때, 민자사업을 계획하여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5년 내외가 소요되고 있다.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우물가에서 송능 찾는 식으로 성과를 내도록 독촉하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수시로 불거지게 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두를

수록 사업은 더 더디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가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예기했던 지난 5, 6년간을 돌이켜 보면,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경험 없이 성과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서두른 대가이다. 경험이나 준비 없이 성과만을 얻으려다 보니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아집을 무기로 버티기하는 어설픈 일들도 많이 발생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실패요인들을 극복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유형의 실패요인들은 대부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위험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완화 내지는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문제는 일정수준의 운영수입 보장과 일반투자사업보다 다소 높은 투자수익률 보장, 투명하고 분명한 재정지원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사용자 징수의 한계문제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그리고, 금융시장의 구조 또는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 위험 헷징과 적절한 분담, 보험가